

도시숲의 폭염 완화 가치 ‘1조 3334억 원’

국립산림과학원, 도시숲의 열섬 완화 공익기능 평가 결과 발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산림이 도시 열섬현상을 완화해 절감하는 전력의 경제적 가치가 1조 3,334억 원으로, 2020년 대비 약 2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서울의 낮 최고기온이 35℃를 넘고 열대야가 장기간 지속되는 등 극심한 폭염이 이어지면서, 도심 열기를 낮추는 생활권 도시숲의 열섬 완화 기능이 주목받고 있다. 열섬 완화 기능은 국립산림과학원이 평가·발표하는 12개 산림공익기능 중 하나로 국민 1인당 생활권 도시립 면적, 도시립 면적당 전력 소비 절감량, 전력 시장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출한다.

열섬 완화 기능의 가치가 크게 상승한 주요 원인으로는 생활권 도시숲 면적의 확대와 전력 시장 가격의 상승이 꼽힌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생활권 도시숲 면적은 2021년 11.48㎡에서 2023년 14.07㎡로 22.6% 증가했으며, 전력 시장 가격 역시 직전

조사 대비 63.9% 상승했다.

이번 평가 결과는 폭염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생활권 도시숲이 제공하는 열섬 완화 기능의 사회·경제적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목재 산업연구과 김기동 박사는 “폭염이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도시숲은 도시의 열기를 낮추고 국민 생활에 실질적인 편익을 제공하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앞

으로도 산림과 목재가 제공하는 공익기능의 가치를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연구를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선우주 기자
sunwo417@daum.net



▲서울 안산에서 바라본 도시숲 경관 (국립산림과학원 제공)

산림청, 가로수 관리 우수사례 선정 발표

출품작 19건 중 국민투표로 5건 선정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전국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가로수 관리 TOP 5’ 공모의 최종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국민들이 결정한 최우수작은 제주 서귀포시의 ‘시민참여 실명제와 가로수 수간주사로 가로수 관리 혁신’ 사례가 선정됐다.

이번 공모는 지난 6월 접수된 전국 지방정부 가로수 관리 사례 19건 중 전문가 심사로 8건을 우선 선정하고, 이에 대해 국민이 직접 투표해 순위가 정해지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최종 선정된 지역은 1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2위 충청북도 청주시, 3위 경상북도 경주시, 4위 경상북도 포항시, 5위 세종특별자치시 등 총 5곳으로 전문가 및 국민으로부터 다층식재를 통한 도시경관 개선, 시민참여형 관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체계적인 가로수 관리를 도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선정된 우수사례는 사례집으로 제작해 전국 지방정부에 배포하고 가로수 조성·관리 정책 수립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안병기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장은 “이번 우수사례가 전국 지방정부의 가로수 관리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우수 관리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홍보해 도심 녹지 확산에도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진아 기자
midal0210@naver.com



▲제주도 서귀포시 가로수관리 우수사례 (산림청 제공)

임업직불금 의무교육 8월 31일까지 이수하세요

작년 감액 사례 중 ‘교육 미이수’ 최다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2026년 임업직불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이달 31일까지 필수 준수사항인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관련 의무교육(2시간 이상)’ 이수를 당부한다고 18일 밝혔다.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임업직불제법)에 따라 임업직불금 등록자는 매년 공익기능 증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만약 기한 내에 교육을 수강하지 않을 경우, 임업직불금 총지급액의 10%가 감액 지급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지난 2025년 임업직불제 준수사항 이행점검 결과, 전체 미준수 감액 사례 311건 중 ‘교육 미이수’로 인한 감액이 285건(전체의 약 91.6%)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은 매년 교육을 놓쳐 직불금이 깎이는 사례가 다시 발생하는 만큼, 올해는 모든 신청자가

기한 내 서둘러 수강을 완료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의무교육은 PC나 모바일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수강할 수 있다.

온라인 교육 포털 ‘임업-in’에 접속 한 뒤 ‘임업인 교육’ → ‘임업직불금 의무교육’ 메뉴로 이동해 본인인증 후 로그인하면 수강이 가능하다.

온라인 사용이 익숙지 않은 임업인은 지방정부 및 전문교육기관에서 개설하는 집합(대면)교육을 통해서도 이수할 수 있다.

이상의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교육 미이수로 인해 정당하게 받아야 할 직불금이 감액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감일인 8월 31일까지 반드시 수강을 완료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선우주 기자
sunwo417@daum.net



▲산림청 제공

산림청, EU 산림전용방지법 대응 설명회 및 대응지원단 운영회의 개최

목재 관련 산업계 글로벌 통상 규제 애로 해소 및 수출 경쟁력 강화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서울 특별시 용산구에서 EU 산림전용방지법(이하 EUDR, EU Deforestation Regulation) 시행에 대비해 국내 목재 및 목재제품 수출기업들을 대상으로 ‘EUDR 대응 설명회’ 및 ‘EUDR 대응지원단 TF 운영회의’를 개최했다.

EUDR은 소, 코코아, 커피, 팜유, 대두, 고무, 목재 등 7개 품목 및 파생제품을 EU 역내에

유통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이들 제품의 생산이 산림전용 및 산림황폐화와 무관함을 입증하는 실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날 설명회는 오는 12월 3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EUDR의 주요 내용, 최근 동향 및 기업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 등을 목재 및 목재제품 관련 협·단체, EU 수출업체와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민·관

협력체계인 ‘EUDR 대응지원단’의 운영회의가 함께 개최돼 현장의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한편, 지난해 우리나라 기업들은 EU를 비롯한 전 세계 110개국에 1억 7천 달러 규모의 목재 제품을 수출했다.

산림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국내 기업이 EU에 수출하기 위한 EUDR 점검표를 설명 후 배포했으며, 실사 정보 수집에

필요한 산림전용 무관 증명 방법과 목재제품 공급망 추적 및 생산지 지리정보 좌표 취득 방법 등 실무 교육을 통해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책을 마련했다.

송원영 산림청 임업수출교역팀장은 “새롭게 도입되는 글로벌 규제로 인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해소해 나갈 것이다.”며, “기업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수출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재난특수진화대 긴급 투입

남부지방산림청은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 일대에 피해수습을 위해 고성능·다목적산불진화차 및 굴삭기·트럭 등 총 16대의 장비와 산림재난특수진화대

등 지원인력 44명을 긴급 현장에 투입했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신속한 수습 및 복구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박은식 산림청장,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현황 점검

박은식 산림청장이 13일 경상북도 포항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현장을 찾아 방제 현황을 점검했다.

박 청장은 선단지(확산 경계 지역)인 포항시 기복면 탑정리

일대에서 추진 중인 유인항공 방제 효과성 실증연구 사업 진행 현황과 중요소나무림인 기계시숲 방제 현황을 점검하고 효율적인 방제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거래정보, 휴업일, 행사·축제 등
가락·강서시장 관련 각종 소식들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농수산물 출하 가능 일정을
사전에 빠짐없이 확인하고 싶다면?

카카오톡으로
가락시장 소식을
받아보세요!

카카오톡에서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채널을 추가해보세요!

QR코드를
스캔해주세요